전북특자도 특별법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

생명경제 가치 높인다

수소 등 특화단지 육성 청정에너지산업 집적화 가능
에너지원 공공 관리 · 주민참여로 수용성 제고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와 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살펴보기 일환으로 농생명산업자구를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농생명산업분야 특례(본보 9월 5일자 3면)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법 핵심축의 하나인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분산에너지법 도입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제35, 제36조)는 전북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 선정 등 수소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적화를 통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제37조)를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에 대비해 에너지산업생태계를 주도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전북에 유치, 지역발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즉 에너지의 분산은 사람과 기업이 밀집한 탓에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공급 전력이 소비보다 많아 유리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잘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100%(RE100)나 각종 탄소장벽 강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람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규모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규모 등을 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례에 담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제39조) 및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제40조)는 도지사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거나 특성화마을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경제 가치로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기 위한 토대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우리 전북에게 전환의 새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흐름속에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 육성 등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특례에 관한 내용을 일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서울장학숙 이전부지 찾은 도의회 행자위원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전북도 서울장학숙 신축 이전부지와 전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해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개관해 약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고,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과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만금 예산 보복 반드시 막겠다"

민주 전북 의원들 '초강수'

김윤덕 · 김성주 의원 등 6명, 국회서 집단 삭발
"尹 정부 전쟁 속 느닷없이 전북이 희생양 돼"
김수흥 · 한병도 의원, 내주 릴레이식 삭발 동참
"예산 살려내지 않으면 정부 예산 틀어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정부의 새만금 SOC예산 삭감에 반발해 집단 삭발했다.

민주당 전북지역 김윤덕·김성주·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노 타이' 셔츠 차림으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식이 시작되자 안 의원은 두 눈을 감은 채 삭발에 임했고, 신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10분가량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산독재 규탄한다' '새만금은 죄가 없다'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전북도당 추산 2000명이 운집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다. 새만금의 예산 보복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야만의 시대와 폭정의 시대에 싸우는 방법으로 (삭발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싸우고 독립영웅 홍범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데 맞서 싸우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백선엽을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전쟁 와중에 느닷없이 전북이 희생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의원은 "이념투쟁이 쌓이고 또 쌓여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켜내고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반드시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준병 의원은 "잼버리를 핑계로 전북에 예산 폭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의원은 "전북 SOC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만금에 대한 빅픽처를 그리겠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 몇 푼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북 지역 의원 8명 중 이날 삭발에 참여하지 않은 김수흥·한병도 의원은 내주 순차적으로 릴레이식 삭발 농성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 의원은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본청 앞에서 삭발할 계획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하나를 보고 미래와 희망을 생각했는데, 전북도민의 새만금 예산을 78%퍼센트 삭감하는 만행을 윤석열 정권이 저질렀다"며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틀어 막겠다"고 경고했다.

삭발식을 지켜본 서영교 최고위원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삭발을 한단 말이냐"며 "삭발은 윤 대통령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뉴시스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역 주민 뜻에 맞는 검찰권 행사"

이창수 신임 전주지검장 취임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그 뜻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되자"고 다짐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그 권한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절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와 증거'를 기초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그럴 때만이 검찰을 향해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맨발 걷기 활성화 건강한 전북 구현

강동화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한 도민의 요청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가 도내 맨발걷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해당 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조성·확충 및 정비사업,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맨발걷기 관련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8회 임시회를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7일 열린 본회의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제5차 문화도시 심사 재개 촉구 건의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를 가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식화, 새만금 SOC 예산 회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7,859억6,200만원 가운데 89억1,200만원을 삭감한 1조7,770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도내 기업 방위산업 기반 조성 · 경쟁력 강화

김희수 도의원, 방위산업 육성 ·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정부의 방위산업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북은 방위산업을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와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 시켜 새로운 방산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여 방위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국가이며,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방위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